



광주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 5일 오전 시민들이 포켓몬 빵을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받고 길게 줄 서 있다.

학부모 지갑 잡아먹는 ‘포켓몬’

핼러윈데이 앞두고 스티커 구입 시즌2 열풍... “한달 수십만원 지출” 부작용 속출

광주시 서구에 살고 있는 강숙자(여·68)씨는 이를 연속 오전 9시 20분부터 이마트에 와서 줄을 섰다. 손녀가 원하는 포켓몬 빵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40분을 기다린 후 강씨는 원하는 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강씨는 “한참 유행일 때도 빵을 사기 위해 고생했는데 갑자기 또 무슨(핼러윈) 한정판이 아니라 당치도 않다”면서 “어른들은 이게 상술인 걸 알지만, 애들 유행에 어른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장 열리는 순간 ‘오픈런’ 우르르 달려올 때 줄서는 ‘탑차런’까지 한정판 판매에 광주 곳곳 긴 줄 빵 버리고 스티커만 쫓...남비 지적 희귀 캐릭터는 수만원에 거래도

일명 ‘피부실’ (캐릭터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의 재열풍에 광주지역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피부실을 원하는 자녀 때문에 한달에 수십 만원어치 빵을 구매하기도 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광주지역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피부실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다. 유행 유행했던 열풍이 수그러지나 했지만, 최근 시즌2 발매에 핼러윈 야광 한정판, 다른 캐릭터 빵까지 연이어 출시돼 부모들의 ‘오픈런(개점 전에 줄 서는 것)’, ‘탑차런(탑차를 기다리며 줄 서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5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 가보니 오픈 전임에도 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남녀노소가 번호표 들고 길게 줄 서 있었다. 뒤늦게 도착해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은 한숨 쉬며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다. 번호표 숫자는 당일 빵의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마트 측의 설명이다. 한 명당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게는 25번까지 많게는 50번까지 번호표가 주어진다. 이날은 30번까지 번호표가 배부됐다. 이를 연속 마트를 찾았다는 안기석(64)씨도 한글날 연휴에 오는 손주를 위해 줄을 섰다.

안씨는 “4일에도 방문했지만 번호표를 못 받아 오늘은 오전 9시부터 기다렸다”면서 “빵이 맛있는 지도 모르겠고, 스티커 쫓아다니는 게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좋아하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고 어른이다. 이걸 상술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맘 카페에는 “한 달에 수십만원씩 캐릭터 빵을 사서 스티커는 애들이 가져가고 빵은(내가) 먹고 있어 지겹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 댓글에 “자녀에게 천원대인 빵 하나 안 사주는 건 뭐하고 차라리 빵이 아예 비싸서 못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남긴 학부모도 있을 정도다. 학부모들은 업체의 상술인줄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실정이다. 결국 희소성이 돈이 된다는 소식에 리셀러(상품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5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소비자가격 1500원인 일반 포켓몬빵이 개당 3000-4000원, 핼러윈 한정판 포켓몬 빵은 1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또 인기 캐릭터 피부실의 경우 개당 1-2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중고거래로 만난 대학생 박모(21)씨는 “포켓몬 빵을 하나에 1500원을 주고 사서 쉬는 날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반 빵은 2-3배 가격에, 핼러윈 한정판 빵은 6-7배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소매업자들 사이에서도 희소성 마케팅에 대한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 포켓몬 빵을 찾는 손님때문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서구 상촌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고영민(59)씨는 “광주에 빵을 납품하는 곳은 총 4곳인데, 한 곳은 식자재 마트나 대형마트에만 납품해 우리같은 작은 마트나 편의점은 세곳에서 납품을 받다보니 많아야 20개를 넘기지 못한다”면서 “간혹 업자들이 사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실세 없이 포켓몬빵 앓는 전화가 이어져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기도 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최근 피부실의 인기가 치솟자 타 캐릭터(디자인·케로로) 빵까지 수년 만에 재발매 품절 대란에 합류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장민주(여·43)씨는 “집에서 비닐 안 뜯고 학교가서 뜯을 거라며 웃는 모습이 너무 뿌듯해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이마트로 바로 왔다”면서 “친구가 학교에서 스티커 자랑했다는 애들 말을 들으면 나도 엄마인데 그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곧 대박” 비상장 주식 60배 부풀려 판매

광주서부경찰, 2억8000만원 가로챈 8명 사기 혐의 검거

비상장 주식의 주가를 60배 부풀려 판매한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서울, 광주 등지에서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 20-30대 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40-60대 피해자 6명에게 전화·문자로 접근해 비상장 주식 9000여주를 판매해 총 2억 8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비상장 회사 2곳의 주식을 주당 500원에 구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3만원 가량에 속여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중개업체 행세를 하며 “곧 상장될 주식이다. 상장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A(30대·경기도)씨와 B(20대·광주)씨는 광주에 거주 중인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들었으며 대포폰과 노트북도 직접 만나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판매 건수를 올릴 때마다 판매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성공금을 분배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해 “○○ 주식회사 팀장, 과장으로 역할을 나누자”, “△△

사이트를 열어보라고 하자”는 등 범행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수만명의 전화번호를 돌리기도 했다.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에 해당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블로그 광고를 올린 적이 없으며 사기범들이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통해 허위 광고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주식을 사기 판매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갖고 있던 노트북 7대와 대포폰 8대를 확보하고 여죄와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상장주식·가상자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접근해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조만간 상장된다. 투자금을 몇 배로 돌려준다’는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쓰는 경우 사기에 주의하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매일 주택단지 조성사업 핵심위 판결 부담에 서구청, 위법 증거 갖고도 제대로 처분 못해

지난 9월 재결된 광주시 서구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 석연치 않은 행정심판이 내려진 것(광주일보 10월 4일자 1면)과 관련, 관할구청인 광주시 서구가 위법 증거를 갖고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결론에 따라 다시 ‘보완 자료 요청’ 단계로 돌아갔다. 다만 서구청은 사업주가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폐율·용적률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반려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기준과 같은 근거로 반려 처분을 내릴 시 사업주가 추가 신청한 ‘간접 강제’ 요청에 따라 구청이 하루 3000만원씩 손해

배상금을 내야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과 건축허가 신청서 간 대지 조성고(건물의 지표면이 되는 지반 높이)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허가 불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나 서구청은 행정위 판결이 부담스러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주 측은 서구청에 오는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8개 건물에 대해 주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추인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감리 지정을 안 한 점, 착공 신고 누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

공문서 위조해 정부지원금 타낸 광주과기원 직원 적발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사업화센터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 의원이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GIST 직원 A씨가 특구재단에 허위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 정부지원금을 타낸 것이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4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데미안랩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무단으로 총장 명의를 사용해 출자법인 인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큐바이 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도 총장 명의로 꾸며 특구재단에 제출했다. 이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p>▶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6억8천</p>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p>(유흥가능, 사무실, 뽀, 룸, 홀덤바)</p>	<p>● 월수익 - 720만</p> <p>● 연수익 - 9000만</p> <p>●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p>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p> <p>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p> <p>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p> <p>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p> <p>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p> <p>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p> <p>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p>
010-6670-9800		010-2614-9801